

참여정부 4주년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2007. 3.



국무조정실

목 차

I. 핵심공약 관리현황	1
1. 핵심공약 현황	1
2. 핵심공약 관리체계	1
II.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2
1. 핵심공약 추진상황	2
2. 분야별 추진성과	3
III. 추진상황별 주요 사례	5
1. 주요 완료과제	5
2. 부진 과제	7
3. 보완필요 과제	9
IV. 향후 조치계획	11
< 붙임 >	
1. 분야별·국정과제별 공약 추진상황	12
2. 핵심공약 추진상황 총괄표	13

I. 핵심공약 관리현황

1 핵심공약 현황

- 16대 대선공약(총 1,347건) 중 참여정부 국정이념과 기초를 반영한 177건의 핵심공약을 선정,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

* 핵심공약 이외의 공약은 소관 부처 자체적으로 관리
(단, 정치개혁 관련 공약 15건은 대통령 비서실 관리)

- 분야별로는, 경제분야 48건, 사회·문화분야 66건, 정치·행정분야 46건, 외교·통일·국방분야 17건으로 구성

4대 분야별	12대 국정과제별
경제 (48)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14) ·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17)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발전(13) ·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4)
사회·문화 (66)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16) ·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14)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31)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5)
정치·행정 (46)	·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25)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21)
외교·통일 (17)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17)

2 핵심공약 관리체계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공약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 소관 부처 : 분기별 추진상황 자체 점검 후 국조실 보고

- 국무조정실 : 매년 초 참여정부 출범일에 즈음하여 종합점검 실시(대통령 비서실과 협의)

- 목표 달성도, 충실성, 이행노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부진과제 등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독려

II.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1 핵심공약 추진상황

- 부진건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나, 완료건수는 매년 10건 이상 증가하는 등 핵심공약 추진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연도별 핵심공약 진행현황

구 분 (점 검 일)	완 료	추진 중		부진**
		정상추진	보완필요*	
1주년(04. 3. 4)	33	99	31	14
2주년(05. 3. 3)	53	109	5	10
3주년(06. 3. 8)	64	99	4	10
4주년(07. 2.25)	74	82	11	10

*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나 상당부분 성과가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임기 내 전부 또는 일부 성과달성이 가능한 경우

** 장기간 이견이 지속되거나 추진상황에 진전이 없어 향후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06년 말 현재, 완료 74건(41.8%), 정상추진 82건(46.3%) 등 대부분 차질없이 진행 중

- 다만, 10건(5.6%)*은 사회적 합의 및 입법 지연(5건), 대외여건 악화(3건), 추진실적 미흡(2건) 등으로 인해 부진

*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도 도입, 250만개 일자리창출, 의료 분쟁조정법 제정,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남북정상회담 개최·정례화,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해결

- 추진 중인 과제 중 11건(6.2%)*은 관련 법 제·개정 촉진(7건), 부처·이해 관계자간 합의(3건), 성과목표 수정(1건) 등 보완대책 필요

* 교원승진체계 재정립, 학운위 기능 강화, 문화재보존기금 설치,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이혼시 자녀 부양의무 명시, 대통령 사면권 엄격행사, 식품안전 거점신고 감시체계 도입, 경인운하 사업 재검토, 의료수가·약가의 공정한 설정 등 의료비용 절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2 분야별 추진성과

1 경제 분야 (완료 21건, 정상추진 26건, 부진 1건)

- R&D 예산 확대, IT·BT·NT 등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05.3), 회계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등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03~'07년간 R&D 예산은 평균 10.6% 증가('03년, 5.3조원→'07년, 8.1조), 이 중 25.3%(2조원)은 기초과학 연구투자에 투입

- FTA 체결 등 **대외경제 개방**을 적극 추진하되, **농어촌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04.3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특별법」,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정

2 사회·문화 분야 (완료 32건, 정상추진 21건, 보완필요 9, 부진 4건)

- 학력·지역·인종에 따른 차별 시정, 호주제 폐지(05.3, 민법 개정), 「성매매 방지법」 제정(04.3) 등 **국민통합과 양성평등 기반 마련**

- 주5일제 시행(03.8),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률 제정(06.12) 등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저소득층 교육·진료 지원 확대, 참여복지 5개년 계획(04.1), 희망 한국 비전 2030(06.8) 수립등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 다만, 「사립학교법」, 「의료분쟁조정법」, 「국민연금개혁법」 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타 분야에 비해 추진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

3 정치·행정 분야 (완료 21건, 정상추진 20건, 보완필요 2, 부진 3건)

-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제정(03.12),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추진, 「주민투표법」(03.12) 및 「주민소환법」(06.5) 제정 등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시책 지속 추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 돈세탁 방지법 강화(06.1 시행), 「재정건전화법」 제정(06.9) 등을 통해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

- 다만, **일부 과제**(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 식품안전처 설치)등은 여야간 이견으로 **부진**

4 외교·통일 분야 (정상추진 15건, 부진 2건)

-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남북 철도연결 등 남북 경협 사업 추진, 9.19 공동성명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건 마련**

- 다만, 지난 해 북한 미사일 발사(06.7), 핵실험(06.10) 등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일부과제(대량살상무기 해결 등) 부진**

* 07년 초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6자간 합의(07.2.13), 남북 장관급 회담 재개 합의(2.15) 등에 따라 한반도 여건 개선 전망

※ 분야별 핵심공약 추진현황

구 분	완료	정상 추진중		부진
		진행중	보완필요	
경제 (48)	21	26	0	1
사회·문화 (66)	32	21	9	4
정치·행정 (46)	21	20	2	3
외교·통일 (17)	0	15	0	2
총 계 (177)	74	82	11	10

Ⅲ. 추진상황별 주요 사례

1 주요 완료과제(06년)

① 기초과학 연구투자 확대 / R&D 예산 지속 확대

- 03~07년간 정부 R&D 예산(일반+특별회계)은 연평균 9.9% 증가, 이 중 기초과학 연구예산 비중은 25.3% 수준(07년 기준)

* R&D 예산 : (03)5.6조원 → (04)6.1조원 → (05)6.7조원 → (06)7.2조원 → (07)8.1조원

* 기초연구예산 : (03)1조 234억원 → (04)1조 2,374억원 → (05)1조 4,630억원 → (06)1조 7,163억원 → (07)2조 593억원

② 차별시정 국가실행계획 수립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 권고안」을 수립(06.2, 인권위)하여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노동자·난민 등 사회적 약자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③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¹⁾(06.8, 공공부문 대책은 06.9월 수립),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²⁾(06.10), 비정규직 보호법률 제정³⁾(06.12) 등

- 1)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확대, 사회보험 가입누락 방지,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 등
- 2) 산재보험 적용, 표준거래계약서 제작·보급, 부당한 계약해지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④ 여성채용 목표제 확대 실시

-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 여성 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2010년 25% 목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등 실시

*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비율 : (03)9.2% → (04)9.97 → (05)10.7% → (06)11.0%

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 공항물류단지(30만평) 및 화물터미널 지역(33만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05.4), 단지조성공사 완공(05.12), 운영개시 공고(06.1)

⑥ 재정건전화법 제정

-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국가재정법」을 제정(06.9), 4대 재정혁신*을 법제화하고 국민감시제도 도입,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⑦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실시기반 구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03.12 제정) 및 동법 시행령(04.12)을 제정, 배출 총량제 실시근거 마련

* 배출권 모의거래 실시(06년, 5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운영관리 지침」 마련(06.9) 등 준비작업을 거쳐 07.7월 시행 예정

⑧ 기 타

○ 특허심사 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 03년 평균 22.1개월 소요되었으나, 06말 현재 9.8개월로 단축

○ 방송통신구조 개편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안문석 교수) 출범(06.7.28)

* IPTV 도입,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구개편 문제 등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마련(07.1 국무회의 통과)

○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확대

- '03~07년간 해양수산분야 R&D 예산*은 평균 11.6% 증가

* 연도별 예산 : (03)1,152억원→(04)1,249억원→(05)1,406억→(06)1,647억원→(07)1,789억원

2 부진과제 (10건)

< 사회적 합의 곤란 등으로 인한 입법지연 (5건) >

①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 교육 관련 단체간 의견 대립이 첨예하며, 상임위에 다수의 관련 법률안(정부입법 1, 의원입법 4)이 계류되어 있고 합의 지연
 - 한국교총 등은 자율경영권 침해·학내 분란 소지 등의 이유로 반대

②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 ③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

- 야당 등은 공비처의 독립성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 중이며, 특검제 상설화 문제와 연계하여 논의한다는 입장
 - * 공비처 설치법안(04.11) 및 특검제 관련 의원입법안(05.4) 법사위 계류중

④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 정부안*(05.3 국회제출) 이외에 의원입법안(6건) 등 총 7개 법안이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어 법안심사 및 단일안 마련 곤란
 - *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9개 법령에 나뉘어져 있는 식품안전 관리업무 일원화
- 식품안전처 설치(정부조직법 개정) 문제와 연계하여 추진 중이나 국회 입법 지연(야당은 임기 말 정부조직 개편에 반대)

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05.12, 이기우 의원 발의)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부처간·이해관계자간 이견
 - * 의료계 등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인정, 무과실 의료사고 정부보상 등을 요구 중이나, 일반 형사사건과의 형평성 위배(법무부), 정부예산 부담(예산처) 등을 이유로 관계부처 등은 부정적 입장

<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한 추진지연 (3건) >

⑥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 사유재산권 침해,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예상(04.12, 금융연구원 용역결과)되어, 기존 제도를 보완·강화하되 동 제도는 제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중장기 과제로 추진**
 - * 공약추진계획(03.7)에 따라 민관합동 T/F(팀장:재경부 차관보) 논의를 거쳐 결정

⑦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 미사일 실험 발사시 인도적 지원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미사일 실험발사 강행(06.7)**
 - * 이후 인도적 지원 중단, 6자회담 복귀 촉구, UN 안보리 대북결의안 지지 표명

⑧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정례화 추진

- 정부는 항상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북측의 미호응으로 개최에 어려움

< 추진성과 미흡 (2건) >

⑨ 250만개 일자리 창출

-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04년 42만개, 05년 30만개, 06년 30만개(06.11월 기준)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나 **당초 목표에는 미달**
 - * 당초 경제성장률 7% 달성, 매년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었으나, 5% 경제성장률 달성, **08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중

10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운영

-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05.12) 하였으나, 중앙과 일선 기관간 연계업무를 담당할 지방조직 설립 지연
- * 노인복지법 개정(05.7)으로 국민연금기금 지원이 중단되어 예산·인력 확보에 애로 (당초 16개 시도에 각각 지방조직을 설립할 계획)

3 보완필요 과제 (11건)

< 관련 법령 재개정 촉진 필요 (7건) >

1 교원승진체계 재정립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개정 기본계획(06.12)에 따라 입법예고(06.12.27~07.1.15) 등 개정절차 진행 중
- * 주요 내용 : 경력평정 비중 축소, 근무성적평정 비중 확대 등

2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사립학교 예·결산 관련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일부 반영(05.12, 사립학교법 개정)되었으며, 관련 의원입법안 국회 계류 중(최순영 의원, 04.9발의)

3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 국민연금개혁법안*이 법사위 계류 중(06.11.30 상임위 통과)이나, 야당 등에서 불완전한 재정안정화 방안이라는 이유로 반대
- * 주요내용 : 보험료율 인상(현 9%→'18년 12.9%), 소득대체율 인하(현 60%→'08년 50%) · 야당은 2065년 이후 재정불안이 초래되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4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이 국회에 제출(07.1.11)되었으나, 기구 독립성 보장, 위원 임명방식 등 국회·관련 단체간 이견

5 협의이혼시 자녀부양의무 명시

- 이혼 숙려기간 도입, 자녀부양사항 합의제출 의무화 등 협의이혼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민법 개정안」 등 국회제출(06.11.3)

6 문화재 보존기금 설치

-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05.11, 박근혜 의원) 되었으나, 국고 출연(재원의 50%) 문제 등 관련 부처와 이견

7 대통령 사면권 엄격 행사

- 「사면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법사위 계류중
- * 사면심사위원회 설치, 부패범죄 사면 배제 등 규정(05.5~06.12, 7건 발의)

< 부처간·관련 단체간 합의 필요 (3건) >

8 식품안전을 위한 거점신고 감시체계 도입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계획(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및 식품안전처 설치문제 등과 연계하여 검토 중
- * 지방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식품위생감시 매뉴얼 작성·배포(06.12), 지방출장소 신설관련 정원문제 등 행자부 협의중

9 경인운하 사업 재검토

- ‘굴포천 유역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위원장:우원식 의원, 05.7~07.2.16)에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07.2.16)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향후 추진방안 마련 필요

10 의료수가·약가의 공정한 설정으로 의료비용 절감

- 07.1월부터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선별등재 방식 도입, 신약특허 만료시 해당성분의 20% 가격인하 등) 시행
- 의료수가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안 논의 중(금년 내 최종안 마련 예정)

< 성과 목표 수정 필요 (1건) >

㉑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가 밴쿠버로 결정(03.7)됨에 따라 2014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

IV. 향후 조치계획

- 참여정부 마지막 해임을 감안, **추진성과를 가시화 하는데 주력**
 - 특히,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 국민통합과 민생·복지 현안과제, 주요 국정과제 관련 공약을 중점 추진
- 공약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독려
 - 부진과제(10건) 및 보완필요 과제(11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로 **원인분석 및 보완대책을 마련**, 다음 분기 실적 보고서 제출
 - 입법지연 과제는 각계 의견수렴, 대국회 협의·설득 등 강화
 - 부처간·관련 단체간 이견은 주관부처 책임 하에 적극 조정 노력
 - * 필요시 분야별 책임장관 회의 또는 국무조정실 조정을 통해 해결
 - 점검결과를 고려하여, 소관부처 조정, 조치시한 연장 등 행정적 조치 시행
 - * 소관 변경 : 신행정수도 건설(건교부→행복청), 인사행정 정비 (5건, 행자부 제외) 등
 - * 시한 연장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등

< 별첨 1 >

분야별 · 국정과제별 공약추진 상황

분야	국 정 과 제	계	추진 상황			
			완료	추진 중		부진
				정상추진	보완필요	
경제 (48)	·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17	8	9	0	0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건설	13	3	10	0	0
	·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4	4	0	0	0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14	6	7	0	1
	소 계	48	21	26	0	1
사회 문화 여성 (66)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16	6	4	5	1
	·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14	10	3	1	0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5	4	1	0	0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31	12	13	3	3
	소 계	66	32	21	9	4
정치 행정 (46)	·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25	10	10	2	3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21	11	10	0	0
	소 계	46	21	20	2	3
외교 통일 국방 (17)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7	0	15	0	2
	소 계	17	0	15	0	2
총 계		177	74	82	11	10

핵심공약 추진상황 총괄표

1.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17건)

관리번호	핵심공약명	소관부처	조치시한	추진상황	비고
1	기초과학연구투자 확대	과기부	07하	완료	신규완료
2	R&D예산 지속 확대	과기부	07하	완료	신규완료
3	200대 핵심전략기술 개발	산자부	07하	정상	
4	IT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계속	정상	
5	세계최고의 디지털강국 실현	산자부 정통부	07하	정상	
6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도약	산자부	계속	정상	
7	주력 기간산업의 세계 최강화	산자부	계속	정상	
8	차세대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통부 산자부	계속	정상	
9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지원	해수부	06하	완료	신규완료
10	BT, NT 등 새로운 기술분야 집중육성	과기부, 산자부	계속	정상	
11	과학기술전문연구요원 확대	과기부	03하	완료	
12	과학기술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과기부	03하	완료	
13	대통령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 신설	과기부	03상	완료	
14	이공계대학교육및연구지원법 제정	과기부	03하	완료	
15	현장맞춤형 기술 재교육을 통한 기술핵심 인력 양성 및 인력자원의 고도화 추진	교육부 노동부	07하	정상	
16	R&D 특구 지정·육성	과기부	07하	정상	
17	특허심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특허청	07하	완료	신규완료

2.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16건)

관리번호	핵심공약명	소관부처	조치시한	추진상황	비고
18	교원승진체계 재정립	교육부	06하	보완	시한연장 (→07하)
19	교육재정 지속 확충	교육부	08하	정상	
20	기획·정책기능 중심의 교육인적자원부 조직 개편	교육부	04하	완료	
21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기구 설치	교육부	03상	완료	
22	지방교육행정조직을 포함한 교육행정개혁	교육부	06하	완료	신규완료
23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추진	교육부	07하	정상	
24	사립학교법개정	교육부	05하	완료	
25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선택적 확대·강화	교육부	06상	보완	시한연장 (→07하)
26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교육부	06상	부진	시한연장 (→07하)
27	단위학교의 자율권 강화	교육부	05상	완료	
28	문화재보존기금 설치	문화재청	계속	보완	
29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문광부	03.7	보완	시한연장 (→07하)
30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	문광부 정통부 방송위	07하	완료	신규완료
3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가칭)	문광부 정통부 방송위	07하	보완	
32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	혁신위	07하	정상	소관변경 (→행자부)
33	정보격차 해소	정통부	계속	정상	

3.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14건)

관리번호	핵심공약명	소관부처	조치시한	추진상황	비고
34	자영업자 소득과약개선 등 보험료 공평부과	복지부	03하	완료	
35	여성채용목표제 확대 실시	여성부 노동부	06하	완료	신규완료
36	차별시정 국가실행 계획 수립	인권위	05상	완료	신규완료
37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인권위	05상	완료	
38	학력과 관련된 차별제도철폐	교육부	05하	완료	
39	사회적차별금지및시행에관한특별법제정	인권위	계속	정상	소관변경 (→빈부격차 차별시정위)
4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노동부 산자부 중기청 법무부	03상	완료	
41	인재 지역할당제 도입	인사위 행자부	07상	완료	
42	협의이혼시 배우자의 자녀부양 의무 명시 (자녀부양에 대한 협의사항 제출 의무화)	법무부	06상	보완	시한연장 (→07하)
43	호주제 폐지	법무부, 여성부	04상	완료	
44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여성부 노동부 중기청	07하	정상	
45	직장보육 및 공동육아제도 활성화	노동부 여성부	07하	정상	
46	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기구 마련	여성부 법무부	03하	완료	
47	성매매 방지법 제정	여성부 법무부	04하	완료	

4.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13건)

관리번호	핵심공약명	소관부처	조치시한	추진상황	비고
48	남북경제공동구역 설치	통일부	07하	정상	
49	DDA 협상에 적극 대비 (농업, 서비스, 시청각, 통신 등)	외교부 재경부 문광부 정통부 농림부 등	계속	정상	
50	동북아 경제협업체 구성	외교부 산자부	07하	정상	
51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창설	산자부	07하	정상	
52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개발	해수부	계속	정상	
53	항만공사법 제정	해수부	03상	완료	
54	지역항만공사 설립	해수부	04상	완료	
55	경부고속철도 조기 건설	건교부	계속	정상	
56	수도권을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재경부	07하	정상	
57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 확충	건교부	계속	정상	
58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조성	건교부	계속	완료	신규완료
59	수도권을 첨단 IT산업 중심지로 육성	정통부	07하	정상	
60	동북아 철도공사 설립	재경부 건교부	계속	정상	

5.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4건)

관리번호	핵심공약명	소관부처	조치시한	추진상황	비고
61	FTA 이행특별법 제정추진(가칭)	농림부 해수부	03하	완료	
62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복지부 농림부	03하	완료	
63	농어촌복지특별위원회 구성	복지부 농림부	04상	완료	
64	WTO/FTA 협상에 따른 지원대책 강구	농림부 해수부	04하	완료	

6.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25건)

관리번호	핵심공약명	소관부처	조치시한	추진상황	비고
65	소득과약 강화를 통한 조세·사회보험의 형평성 제고	국세청	07상	정상	
66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감사원	07하	정상	
67	국회에 감사원 감사요청권 부여	감사원	03상	완료	
68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통합 연계체제 조기구축	행자부	07하	정상	
69	소방방재청 신설	행자부	04상	완료	
70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무부 청렴위	06하	부진	시한연장 (→07하)
71	공직사회 비리척결	행자부 법무부 감사원 등	계속	정상	소관변경 (청렴위 추가)
72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 추진	인사위	계속	정상	
73	대통령 사면권의 엄격한 행사	법무부	06하	보완	시한연장 (→07하)
74	돈세탁방지법의 강화	재정부 법무부	07하	완료	
75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처벌법규 강화	법무부	07하	정상	
76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	법무부	06하	부진	시한연장 (→07하)
77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복지부 식약청	06하	부진	시한연장 (→07하)

관리번호	핵심공약명	소관부처	조치시한	추진상황	비고
78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 확대	복지부 식약청	05하	완료	
79	식품안전을 위한 거점신고 감시체계 도입	식약청	06하	보완	시한연장 (→07하)
80	제정건전화법 제정	예산처	06하	완료	신규완료
81	정보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 및 부패방지	정통부 국세청	07하	정상	소관변경 (행자부 추가)
82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구현	행자부 인사위	07하	정상	소관변경 (행자부 제외)
83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외부인사 참여 확대	법무부	03하	완료	
84	각 부 장관에게 인사운영 자율권 부여 및 책임행정 강화	행자부 인사위	07하	정상	소관변경 (행자부 제외)
85	다면평가제 등 객관적 인사평정기준 마련	행자부 인사위	04하	완료	
86	우수 인재 풀의 극대화	인사위	04상	완료	
87	인사행정 기능의 정비	행자부 인사위	07하	완료	
88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예산처	04하	완료	
89	정부조직 개편 및 정부기능 효율화	혁신위	06하	정상	시한연장 (→07하)

7.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5건)

관리번호	핵심공약명	소관부처	조치시한	추진상황	비고
90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노동부	06하	완료	신규완료
91	노사정위원회의 발전적 개편	노동부	06하	완료	
92	산별교섭의 효율적 정착	노동부	07하	정상	
93	주5일제 조기정착으로 생산성 향상	노동부	03상	완료	
94	주5일근무제 시행 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도입 지원 확대	재정부 노동부 중기청	03하	완료	

8.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14건)

관리번호	핵심공약명	소관부처	조치시한	추진상황	비고
95	언론산업 선진화	문광부	계속	정상	
96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공정위	계속	정상	
97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 도입	재경부, 법무부	03하	완료	
98	통합도산법 제정	법무부	03하	완료	
99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재경부	계속	정상	
100	재벌금융회사 보유 계열사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재경부, 공정위	04하	완료	
101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재경부, 공정위	07하	부진	
102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방지	재경부	계속	정상	
103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재경부, 금감위	03하	완료	
104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근절	공정위	계속	정상	
105	과다한 집대비 지출 관행 개선	국세청	03하	완료	
106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 적극 도입	재경부	03하	완료	
107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 제도 유지	공정위	계속	정상	
108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재경부	07하	정상	

9.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21건)

관리번호	핵심공약명	소관부처	조치시한	추진상황	비고
109	호남고속철도 신설	건교부	계속	정상	
110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전담추진기구 설치	건교부	03상	완료	
111	신행정수도 건설	건교부	계속	정상	소관변경 (→행복도시 건설청)
112	지방대학 연구역량 강화	교육부 산자부	07하	정상	
113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의 연계 강화	산자부	07하	정상	
114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제정	교육부	04상	완료	
115	지역별 대학의 연계체제 강화	교육부	03하	완료	
11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마련	재경부 행자부	07하	정상	
117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행자부	04하	완료	
118	지방세 제도개선 및 세수확충	행자부	07하	정상	
119	지방양여금 확대 및 개선	행자부	04하	완료	
120	지방재정발전위원회 설치	행자부	04하	완료	
121	자치경찰제 도입	행자부 경찰청	07하	정상	
122	주민소환제 도입	행자부	07하	정상	
123	주민투표제 도입	행자부	05하	완료	
124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행자부	03하	완료	
125	수도권지역 토지이용 및 거래에 대한 제도 정비	건교부	04상	완료	
12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산자부 예산처	03하	완료	
12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예산처	03하	완료	
128	기업 지방이전 촉진	산자부 건교부	계속	정상	
129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산자부	07하	정상	

10.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31건)

관리번호	핵심공약명	소관부처	조치시한	추진상황	비고
130	경인운하 사업 재검토	건교부	03하	보완	시한연장 (→07하)
131	250만개 일자리창출	노동부	07하	부진	
132	40세이상의 고위험자에 대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복지부	계속	정상	
133	5대암 정기검진서비스 전국민 제공	복지부	04상	완료	
134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료율의 단계적 현실화	복지부	06하	완료	신규완료
135	건강보험재정통합 유지·보완	복지부	03하	완료	
136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	복지부	04하	완료	
137	의료수가 및 약가의 공정한 설정 등으로 의료비용 절감	복지부	06하	보완	시한연장 (→07하)
138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복지부	04상	완료	
139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복지부	계속	정상	
140	국가전염병 관리 시스템 도입	복지부	04상	완료	
141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복지부	07하	정상	
142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 범위 확대	복지부	07하	정상	
143	응급센터 인프라 확충	복지부	07하	정상	
144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복지부	06하	부진	시한연장 (→07하)

관리번호	핵심공약명	소관부처	조치시한	추진상황	비고
145	저소득 가정의 보육료 절반을 국가 지원, 차등보육료제 시행	여성부	07하	정상	
146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복지부	05하	완료	
147	국민연금재정안정화	복지부	06하	보완	시한연장 (→07하)
148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50만개 창출	복지부	07하	정상	
149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운영	복지부	07하	부진	
150	대통령직속 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복지부	03하	완료	
151	만 5세아동의 무상보육 및 교육의 확대	교육부 여성부	07하	정상	
152	방과후 교육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확충	교육부 복지부	05하	완료	
153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복지부	07하	정상	
154	차상위계층(의료급여)시행	복지부	08하	정상	
155	참여복지5개년 계획 실천	복지부	03하	완료	
156	투기수요억제 대책의 지속적 추진	건교부	계속	정상	
157	주택자금 지원 강화	재경부 건교부	계속	정상	
158	주택공급 확대	건교부	07하	정상	
159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실시기반 구축	환경부	06하	완료	신규완료
160	지속가능발전위 위상강화	환경부	03하	완료	

1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7건)

관리번호	핵심공약명	소관부처	조치시한	추진상황	비고
161	금강산관광활성화 및 남북관광교류 확대	통일부	계속	정상	
162	개성공단 건설 실현	통일부	계속	정상	
163	각급 남북회담 정례화	통일부	계속	정상	
164	국민지지와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통일부	07하	정상	
165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및 정례화 추진	통일부	07하	부진	
166	한반도 평화선언 실현	통일부	07하	정상	
167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통일부	07하	정상	
168	남북경제공동체 계획 수립	통일부	07하	정상	
169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방송교류	통일부 방송위	07하	정상	
170	남북간 방송기술 교류 지원	통일부 방송위	07하	정상	
171	남북합의사항 실천을 통한 남북상호간 신뢰증진	통일부	계속	정상	
172	이산가족문제의 획기적해결	통일부	계속	정상	
173	SOFA 개정 및 운영체제 개선	법무부 외교부	07하	정상	
174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	통일부 국방부	계속	정상	
175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통일부 외교부	계속	부진	
176	북한 핵문제 해결	통일부 외교부	계속	정상	
177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주도	통일부 외교부	07하	정상	